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여수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불교를 세계불자들에게 알리고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12일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등축제 점등식 모습.

## 세계불교연대...지구 살리자

2012 WFB 10개년 결의후 15일 폐막...30여국 75개 지부 참석

세계 불교인들이 한데 모여 우의를 다지는 '세계 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21세기 불교 생태환경사상과 수행'을 주제로 열린 제26차 WFB 한국대회의 폐막식이 6월 15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WFB 30여 개국 75개 지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린 WFB대회에서 세계 각국 불교지도자들은 세계와 종교 평화를 이룩하는 'WFB 한국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세계불교지도자들은

세계평화와 종교간 대화, 문화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불교연대 강화하고, 오계를 지키고 참선을 생활화하는 뜻을 모았다. 특히 비윤리적 행위를 통해 불교적 신념과 정체성, 존재를 침해받는 지역의 대중을 위해 불교적 신념과 실천을 확산하고 지원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자고 다짐했다. 또 불교의 유·무형 가치와 불교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소개하자고 강조했다. 이밖에 세계 곳곳에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불교 청년 개발에 노력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폐회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아른 WFB 부회장의 대회답사, 대회기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WFB본부는 WFB한국대회 집행위원장 진옥 스님에게 감사패도 전달했다. 이에 앞서 6월 12일 열린 WFB 총회에서는 WFB 상임집행이사 진월 스님이 WFB 부회장으로, 이치란 WFB 사무차장이 상임집행이사로, 김의정 WFB 부회장이 명예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한편 11일부터 16일까지 여수 일대에서 열린 WFB 한국대회에서는 학술포럼, 불교리더십 세미나, 세계 고승구대법회, 팔만대장경 공연,

**WFB 한국선언문**

△생태환경 보호 활동 실천 △세계·종교평화 위한 연대 강화 △오계 참선 생활화 △불교신념 침해 지역 지원 △인도주의 활동 진흥 △경제공동체 내 불교기초 침 실천 △불교문화 대중홍보 △불교교육기관 진흥 △국제기구 협력 △지도자 및 청년 육성

창작 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공연, 화엄사 및 송광사 사찰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11면**

### 한국불교계 유감 및 사과 촉구

中, 티베트 참석 거부...WFB한국대회 보이콧

제26차 WFB대회에서 중국불교 대표단(단장 석영)은 티베트명정 부대표단의 참석과 관련해 12일 개회식 참여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보이콧했다. 중국불교대표단이 문제 삼은 이는 티베트를 대표해 참가한 페마 친쵸리 WFB다람살라지부 지부이사(중앙 티베트 행정부 종교문화장관) 등이다. 중국불교대표단은 12일 오전 열린 WFB총회에서 WFB다람

살라지부 참석을 반대해 이들을 퇴장시켰다. 중국정부는 최근 달라이라마의 유류순방을 두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미 중국불교계는 WFB한국대회 조직위원회가 초청한 삼동린포체의 10일 입국으로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다. 티베트 망명정부 조대 총리를 지내는 등 최고위 자문역을 하고 있는 삼동린포체는 달라이라마를 대신해 방한한 것으

로 알려졌다. 중국불교계는 대회 직전 당초 100명 규모였던 대표단을 5명으로 축소했다. 중국불교대표단은 13일 오전 6시 부산을 통해 귀국했다. 집행위원장 진옥 스님은 "WFB다람살라지부는 공식지부다. 중국 측 독단적 행동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계종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대표단의 일방적 철수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청했다. 이어 조계종은 "중국불교계와 건전한 관계를 위해 관계를 재설정 할 것이며, 자유로운 티베트 불교활동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양국 불교관계의 변화를 알렸다. **여수=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불법사찰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조계종, 비대위 구성 등 불교계 사과요구 강경 대응 천명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의 민간인, 종교계 불법 사찰 재조사 결과에 대해 불교계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14일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불교계 불법 사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불교계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종단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책임자 처벌과 제도적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조계종의 이런 반발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검찰이 6월 13일 발표한 민간인 사찰 조사결과가 '꼬리 자르기식' 수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 불교계 사찰은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에게만 이뤄졌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들의 직접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비대위는 민간인 불법사찰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 비대위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해 불교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2천만 불자들의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린 검찰 수사는 '허즉생(許即生)의 사기'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와 현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비대위는 △불법 사찰 자료 일체 공개 △검찰총장 및 수사 관계자 문책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 △이명박 정부 사죄와 의혹 당사자 공직 사퇴 △불법사찰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檢 "범죄행위 성립 안돼"**  
**불교계 국정조사 등 요구**  
**청와대까지 항의 행진도**

일선 사찰의 대응도 이어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은 6월 15일 호법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청와대와 주간한국을 항의 방문했다. 가두행진 중에 경찰과 기관원들이 조계사 신도들의 길을 막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출범식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현 정권의 불교계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종단을 잠정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훼손사건"이라며 "최근 중

단 각종 사태와 관련해 불법사찰을 주도해 온 정보기관이 개입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빠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계사 호법위원회는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정부와 정보기관, 사정기관에 대한 항의시위 조직 △정보기관원들의 사찰 출입 금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불교계 단체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상임공동대표 퇴후)는 '반인권적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은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인들조차 이렇게 심각하게 감시해 왔다면, 대체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흉폭하게 사찰해 왔는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도 불교계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중앙신도회는 "이명박 정부는 불법사찰을 자행한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고 불법사찰에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천명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중앙총회, 쇄신 법안 다뤄지나

연석회의 개최... 임시회 운영안 논의

사찰예산회계법 등 상정 예정

조계종총무원이 6월 7일 천명한 쇄신 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쇄신 법안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중앙총회에서 상정·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중앙총회는 6월 11일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190차 중앙총회 임시회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총회위원 불징계권을 비롯해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략적인 법안을 보고 받았으며, 관련 분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대표 쇄신 법안인 사찰예산회계법

과 사찰운영위원회법이 논의되며, 중앙총회법 개정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중앙총회위원 불징계권은 이미 지난 5월 23일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제안된 안건으로 삭제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된다. 또,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산중총회법, 교구중회법 개정안과 새롭게 임명된 호법부장 서리 정안 스님의 임명 동의, 재심회계위원회 선출의 긴급 인사 안건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총회는 준비 기간이 짧아 중앙총회가 처리 가능한 범주의 안건만을 다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쇄신 법안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일 기자**

**893호 INDEX**

중단 조계종 출가계도 공청회	2
종합 쇄신계획 각계 입장 잇달아 종교인 과제 워크숍 한마음선원 부의금 전액 회향	3
특별기획 통합종단50년 과제-자비실천	12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수행일화·다례제	15

한국불교중앙종회 집행이사 열반 100주년 다례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대한불교조계종 제1차 쇄신 계획'을 지지하며, 쇄신안의 실천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사 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 운영, 산중공의 복원, 승단의 청정성 회복 등을 목표로 설정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차 쇄신 계획'은 전통적인 승가 공동체의 운영 원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한 사찰 재정 공개, 사부대중 공동체 운영, 재가 전문종무원 양성 등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개혁안을 담고 있어 한국불교의 대혁신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봉은사 사부대중은 이번 쇄신 계획이 결실을 맺어 조계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쇄신안의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심사찰에서 묵묵히 청정한 수행자의 길을 걷는 스님들은 봉은사의 자랑입니다. 도심교의 현장에서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매일 예불, 발우공양, 운역, 기도를 통해 산중사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7년 사찰 재정공개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매일 신도회 임원 전체가 참석하는 사찰확대회의에서 봉은사의 재정 현황이 보고되고 있으며, 최종 의결기구인 중무회의에 신도회 회장단은



물론 부장단까지 참석해 명실상부한 사부대중 사찰 공동운영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봉은사의 전통을 기도와 법화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관음재일 봉행하는 관세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기도에는 4천여 불자가 동참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계경제 3학에 정통한 큰스님들을 모시고 선교대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